

화물차 불법주차 위험한 주택가...지자체 단속은 느슨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마구잡이 주차
통학로 안전 위협·사고 위험 아찔
무개념 도로 점령에 주민 민원 속출
차 빼달라 하면 되레 화 내기도

광주 등록 화물차 1만 3800여대
658면 뿐인 공용차고지는 텅텅

※.지난 13일 오후 광주시 북구 일곡동 현대아파트 단지 입구 이면도로. 도로 한 켠을 대형 화물차들이 즐지어 점령한 채 세워져 있었다.

코로나19가 다소 누그러진데다, 날씨가 풀리며 밖으로 나왔던 아이들이 아파트 이면도로에 주차된 커다란 화물차 사이를 뛰쳐나오다 지나다니던 차량과 맞닥뜨리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다.

어린이집 앞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대형 화물차가 마구잡이로 주차된 탓에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위험해 보였다.

주민 김지훈(46)씨는 "불법주차된 트럭 사이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 부딪힐뻔 한 게 한 두번이 아니다"면서 "화물차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차량을 빼달라고 하면 되레 화물차주가 화를 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 도심 주택가 등 곳곳에 불법으로 주차된 화물차들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대형 화물차들이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나 순환도로 인근 간선도로변 등에 밤샘 주차해놓는 상황이 한 두해가 아닌데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



도로는 불법주차 몸살...공용차고지는 한산



지난 13일 오후 광주시 북구 오차동 무등파크맨션아파트 인근 도로 1개 차선을 불법 주차된 화물차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으며(왼쪽), 14일 자정께 찾은 광산구 평동산단 내 화물차공용차고지는 주차장 절반 가량이 비어 있었다.

이다. 당국의 단속도 소극적으로 이뤄지다보니 화물차 도심 주정차를 별 문제 없는 일로 인식하고 있는 무개념 화물차주까지 생겨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한 화물차 단속 건수는 지난 2017년 2223건, 2018년 5111건, 2019년 5506건, 2020년 5600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을 감안, 행정당국이 계도 중심의 단속을 폈는데도 도심에 불법 주정차 장소로 택한 화물차가 쏟아졌다. 느슨한 단속이 되레 화물차주들에게 도심에 주정차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화물차운송사업법)상 영업용 버스나 화물차량은 노란색으로 된 번호판의 허가를 받기 전 차고지(주차장)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차고지를 벗어나 새벽 0시~4시까지 1시간 이상 한 장소에 고정 주차를 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화물차의 경우 5t 이상은 20만 원, 1.5~5t 이하는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런데도 최근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 아파트나 주택가 이면도로지만 일부는 주요도로 가-감속차로 주변에도 주차해놓고 사라져 교통사고를 야기할 우려도 제기된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평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주민들 민원도 속출하는

형편이다.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주차된 대형차량들로 통학로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국의 느슨한 단속 방침 때문에 '이런 데 주차해도 괜찮다, 법을 어겨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화물차가 도심에 주차하면서 공용 차고지는 오히려 주차 공간이 여유로운 형편이다.

14일 새벽 광주시가 운영하는 진곡·평동 3차 화물차 공용차고지는 10면 중 2면 꼴로 주차할 공간이 남아있었다.

광주 등록 화물차가 1만 3800여대로, 공용 대형 화물차 차고지의 주차면적이 고작 658면(진곡

차고지 430대·평동 3차 238면)임을 고려하면 미어터져야 하지만 오히려 남아돌고 있는 셈이다. 멀리 떨어진 차고지를 형식적으로 신고해놓고 정차 주차는 집 근처에 하는 화물차주가 많기 때문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관련법의 허술함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해진 예산과 부지가 한정된 탓에 도심 외곽으로만 쏠리는 광주시의 화물 차고지 조성 방안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광주시에 관계자는 "하남 첨단 3지구 연구개발 특구(면적 4만5554㎡·400면 규모)에도 화물차 공용 차고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김민석 기자 jusbh@

2년6개월 vs 6개월...비슷한 산재 사망사고 구형량 큰 차이

산업안전법 양형 강화 기류 속

안전 조치 소홀한 업체 대표

법원 선고 형량 관심 집중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일하다 파쇄 설비에 끼여 숨진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검찰이 해당 업체 대표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량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에 주목, 양형 배경 및 향후 법원의 선고 형량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2)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

단 내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직원 B(27)씨가 파쇄 설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업체 대표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었다.

당장, A씨 재판 사흘 전인 지난 9일만 해도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진행된 회사 대표 C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구형량을 놓고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피해 유족들의 불만을 산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8일 광주시 광산구 사암로 철거공사 현장에서 7m 높이의 공장 지붕 위에 올라가 패널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진 50대 노동자 D씨 사고와 관련, 회사 대표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해당 회사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난간 또는 추락 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았고 사업주측도 작업 과정에서 D씨 등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었다.

유족들은 당시 재판에 출석, "안전 장비도 없이 7m 높이에서 작업하다 숨진 목숨값으로(구형량)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이라면 납득할 수 있겠냐", "합의 시도 과정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며 항변했었다.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회사측의 안전 조치 소홀로 산업 현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은 비슷한 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구형량이 뜰썩날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법원의 선고 형량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마다 양형인자가 다르고 특수성이 있는 만큼 판결도 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워낙 다른 점, 피해자 유족 말대로 '집행유예가 나올 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3명 산재 신청 소극적

안전보건진단결과 종합보고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3명 이상(38.7%)이 산재 신청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관련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한 '2021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안전보건진단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8.7%(82명)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병일 요양 치료가 필요하지만 산재 신청을 않고 공상(보상금 종결)이나 개인 치료로 대체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전 보고서는 노무법인 '사람과 산재'가 삼성전자 노조의 의뢰를 받아 삼성전자 광주공장 노동자 2600여 명 중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노동자 설문과 조합 간부 집단 심층 면담 등으로 이뤄졌다. 또 10명중 8명(84.9%)은 인사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고 답했고, 79.2%는 향후 산재사고가 발생해 산재신청을 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다.

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산재 신청 방법, 절차 및 보상 내용에 대해 교육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72.2%(153명)가 '아니오'라고 답했고 정기 안전보건교육(분기 당 6시간)을 받지 않았다고 답한 노동자도 81.6%나 됐다. 보고서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안전보건진단 결과 37점으로 '불량'이라고 평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치장 난동 몽골인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14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몽골인 A(3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 10분께 만취한 채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내방동 한 숙박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여론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였다. A씨는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체류 중인 상태였다. /김민석 기자 mskim@

오피스텔, 신축부지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 가능
-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구. 14평)
- ▶ PF 28억 확정, 지하 1층 공사 중
- ▶ 매매 - 21억원, 조정가
- ▶ 중개환영. 010-3605-50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